

다시 독도문제를 생각한다

- 독도는 영토문제를 넘어, 역사문제이다 -



박 창 근

<본회 고문 / UNEP Global 500>

작금 일본은 또다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 국제 분쟁화 하려하고 있다.

오랜 전의 일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 방위백서(2005년부터)가 발간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역사 왜곡 교과서 출판이 잇따라서 한·일간의 역사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간적이 있다.

당시 이를 참다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이 지난 세기에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는 '역사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은 유엔

(UN)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독도는 한 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말했다.

독도가 한·일간에 분쟁이 된 것은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1952년 1월18일 발표된 대한민국 국무령 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나오면서부터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선진 어업으로부터 한국 주변의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의 동쪽에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긋고 일본 선박의 출입을 막았다. 일본 정부는 즉각 이를 시정하려 했지만, 냉전 시대 자유진영의 분열을 우려한 미국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 후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통 정치경제학자인 노다니엘은 2006년 6월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을 앞두고 한·일 양국 고위 관계자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밀약이 합의됐다는 내용을 확인해, ‘독도밀약(2008년)’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는 1965년 1월11일 서울 성북동의 범양상선 소유주 박건석의 저택 훔바에서 정일권 총리와 일본 국무대신의 밀사인 우노 소스케 중의원 의원(나중에 총리) 등이 모여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해결하지 않는 것을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약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밀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보자면 아쉽게 짝이 없지만, 일본이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성과를 부인할 수도 없는 밀약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인을 향한 립 서비스 외에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그리고 군국주의로 회기하려는 정책 속에서 독도를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겐바 외무대신 발언)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문서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표기에 흥분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감상적인 유행가만을 부르기 보다는 독도문제가 한·일 간의 무력분쟁으로 까지 치달을 때, 갈수밖에 없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에 영향을 줄 쟁점(일본이 1905년 1월28일 각의 결정으로 독도라는 무주지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에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으로 시작된 한국의 실효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하여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㉔